

<https://www.state.gov/g7-foreign-ministers-statement-on-the-hong-kong-chief-executive-selection/>

<G7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Hong Kong Chief Executive Selection>  
MAY 9, 2022

The text of the following statement was released by the G7 foreign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Begin Text:

We, the G7 Foreign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underscore our grave concern over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Chief Executive in Hong Kong as part of a continued assault on political pluralism and fundamental freedoms.

Last year, PRC and Hong Kong authorities moved away from the ultimate aim of universal suffrage as set out in Hong Kong's Basic Law by increasing the number of non-elected members appointed to the Election Committee and dramatically curtailing the number of voters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elections.

The current nomination process and resulting appointment are a stark departure from the aim of universal suffrage and further erode the ability of Hong Kongers to be legitimately represented.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is steady erosion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and Hong Kong's autonomy. We continue to call on China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and its other legal obligations. We urge the new Chief Executive to respect protected rights and freedoms in Hong Kong, as provided for in the Basic Law, and ensure the court system upholds the rule of law.

다음 성명의 본문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G7 외무장관들과 유럽 연합의 최고 대표에 의해 공개되었다.

우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의 G7 외무장관 및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홍콩 행정장관 선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지난해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 당국은 선거위원회에 임명된 비선출 위원을 늘리고 위원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보편적 참정권이라는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났다.

현재의 지명 절차와 그에 따른 임명은 보편적 참정권의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홍콩인들이 합법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지속적인 침식과 홍콩의 자치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과 다른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 우리는 새 행정장관이 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홍콩의 보호받는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법원 시스템이 법의 지배를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

<미국 중국 쿼드플러스 한국 고려 안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은 쿼드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한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쿼드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회원국을 추가하기보다는 쿼드가 내놓은 기존 의제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은 그간에도 관련 질문에 쿼드에 회원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는 아직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해 이 고위 당국자는 전날에도 동행 기자단에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오는 24일 일본에서 이들 4개국 정상의 두 번째 대면회담이 열립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코로나19로 북한이 외부와 차단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더 큰 충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제의에 대응하지 않은 요인이 현재 코로나 상황일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코로나19를 지원하고 북한에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됐다고 이는 북한이 결단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제스처가 아니라 매우 진지한 관여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북한이 중요한 국내 문제에 직면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